

16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3748.37		865.41
	(+91.09)		(+0.69)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550		1417.90
	(+0.030)		(-3.40)

AI發 반도체 랠리, 코스피 ‘새 역사’

삼성·하이닉스 동반 급등
외국인 이달만 5조 순매수
모건스탠리 “4200도 가능”
환율 변수에도 낙관론 우세

16일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3750선에 바짝 다가서며 국내 주식 시장의 새 역사를 열었다. 3분기 깜짝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기대감,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 진입 가능성 등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49% 오른 3748.37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기록했던 장중 최고치(3659.91)와 종가 최고치(3657.28)를 모두 갈아치웠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5000억원 가량 사들이며 시가총액은 3085조원으로 불어났다.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수(매수가 매도보다 많은 것) 속에 삼성전자는 2.84% 오른 9만7700원, SK하이닉스는 7.10% 오른 45만2500원에 마감했다. 두 반도체 기업 모두 사상 최고가다. 반도체 투톱이자 국내 증시 투톱이 파죽지세로 오르면서,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까지 높아졌다.

15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



코스피가 전 거래일(3657.28)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에 마감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홍보관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이며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반도체 기업인 TSMC는 2.96%, AMD 9.4%, 브로드컴은 2.09% 상승 마감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3% 이상 올랐다.

글로벌 AI 투자 열기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라 전망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엔비디아,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6655억원 순매수했다. 10월들어 누적 매수액은 5조4825억원이다. 이중 삼성전자 비중이 70%(3조7056억원)에 달한다.

그간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대

한 매도 의견을 자주 냈던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최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만6000원으로 올렸고, 노무라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54만원으로 높여 잡았다. AI발 반도체 수요 증가로 디램(DRAM)과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이 발생해, 이 분야 강자인 삼성전자가 슈퍼사이클의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불안정성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지난 14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 연설에서 “은행 시스템 내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한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를 중단할 계획”이라며 “그 시점이 앞으로 몇 달 내 올 수 있다”고 했다.

‘코스피 5000’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는 지난 6월 20일 3000선을 넘은 이후, 석 달여 만인 지난달 10일 종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 3314.53을 기록했고, 채 한 달이 안 된 2일 3500선마저 뚫었다. 올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56%로 주요 30여국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투자 전망은 장밋빛이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슈퍼사이클과 개혁의 결합’ 보고서를 내고 내년 6월까지 코스피 목표치 상단을 3250에서 3800으로 올려 잡았다. 기술업종 강세와 반도체 업황 회복 등이 맞물린다면 4200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정치 상황에 따라 증시 활성화 정책이 부진하는 등 리스크가 생길다면 310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트럼프 리스크(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투자 부담)에 따른 원화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의 환차손(증시 이탈)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쪼टा운’이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 확대 가능성은 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5 제약·바이오 포럼’ K바이오 패러다임의 변화 독자적 기술로 혁신 주도

차세대 바이오 혁신을 이끌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오는 10월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5 제약·바이오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차세대 혁신 기술들을 소개하고 그 가능성을 다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보유한 인벤티지랩과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보유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각자의 독자적 기술을 소개하고, 미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망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기지속형 약물전달 플랫폼의 임상적·산업적 가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주목을 받는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개발 ▲국정과제로의 동물대체시험법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연구자와 기업, 그리고 일반 청중에게 혁신 기술과 산업 전망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 제: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 시: 2025년 10월22일(수) 오후2~5시
- 장 소: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및 참가신청: 2025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forum@metroseoul.co.kr



최태원 1.4조 재산분할 뒤집혔다 盧비자금은 불법, 법적보호 안돼

대법원, 이혼 소송 파기환송
SK, 경영권 리스크 일시 해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자금’으로 판단하면서 SK그룹이 우려하던 경영권 리스크도 일단은 한숨 돌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



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핵심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자금’으로 판단하면서 이 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본 항소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직 중 받은 뇌물을 사돈 관계에 제공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고,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이 자금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원심 판단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李 “‘일단 안 돼’ 대신 ‘일단 돼’로 마인드 바꿔야”

재생에너지·바이오·문화분야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재생에너지·바이오·문화분야를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는데, 장애요소가 있다면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용가능한 부분에서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며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

실에서 문화·재생에너지·바이오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팔길이 원칙인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가 대원칙임에도 여러 규제가 있다”면서 “경제 회복과 민생 강화는 결국 기업·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핵심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서 권한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선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유롭게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 안전과 국민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인데,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 그것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은 건 웬만한 건 허용한다는 걸 최소한 규제 원칙에서 지켜줘야 한다”며 규제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일단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면서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아예 장을 못 담게 하자고 할 게 아니고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 ▲與 “국감서 ‘쿠팡 불기소 윗선 외압’ 폭로 나와… 이러니 검찰개혁”
- ▲김민석 총리 “부마민주항쟁 진실 규명하고 시민 명예 회복에 모든 노력”

/사진 뉴시스

- ▲장동혁 “김현지, 이 대통령과 한몸처럼 움직인 사람… 실제 드러날 것”
- ▲외교부, 정동영 북미회담 전망에 “아는 바 없어… 필요시 적극 지원”

- ▲주한미군, 韓 정부에 ‘특검 압수수색’ 항의 서한
- ▲유철환 권익위원장, 청렴도 지적에 “송구하고 드릴 말씀 없어… 시정하겠다”